

여야, 현재소장 등 현안 마다 이견 확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탈(脫) 원전 등 트럼프, 내달 8일 오전 국회연설할 듯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3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 탈(脫) 원전 등 현안 마다 이견을 확인했다.

정 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했다.

◇공영방송 보결 이사선임…민주 '방통위에 맡기자' vs 한국당 '우리가 행사'

우 원내대표는 회동 전 모두발언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있다"며 "공영방송은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 관행은 (이사를) 정부여당 몫, 야당 몫으로 나눠서 추천하다보니 지극히 정치적으로 결합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법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며 "더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법이 정한대로 하자"고 촉구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이사선임과 관련해 "법 규정에 따라 보결 임원은 잔여 임기를 (수행) 하기 때문에 그 취지에 따라 보결 임원 후임은 그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돼야 하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이해하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여당과 야당 몫에 대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뒤 "이점에 대해서 여당이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 "현재소장 임기 6년 보장해야" vs 野 "임기 논란, 대행체제 근거 안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법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는데 임기와 관련해선 우리가 빨리 우 처리해주는 것이 좋겠다"며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인 현재 현재소장 공백사태가 소장 임기 문제와 관련이 있다. 임법위기가 사

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회에 해야 할 사법부에 대한 예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현재소장 임기 6년 보장을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매번 반복되는 현재소장 임기 논란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솔기로운 해법을 찾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이에 반대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재소장 문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논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소장은 빠른 시일 내에 후임이 결정돼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재소장 임기 문제는 민주당과 견해가 전혀 다르다"며 "임기는 헌법이 아닌 하위 법률에 위임하는게 맞지 않는 것이 다수 견해다. 현재에서도 재판관 회의를 통해 결론난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김이수 현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다가 뒤늦게 와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소장을 직무대행 체제로 오래두는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의 임무를 방지하면서 로드맵 완성에 힘을 보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새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與 "野도 협조해달라"…한국당 "文 책임 물을 것"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2080년까지 로드맵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며 "야당도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정부 정책 방향을 존중하면서 로드맵 완성에 힘을 보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새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반편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과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 문제에 대해 우리가 말에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고손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질 것인가에 대해 이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 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국민의당 김동철(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언급이 없이 속의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통해 미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울러 탈원전에 대해서도 "원전은 반도체 산업에 버금가는 우리 수출 먹거리다"며 "이것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인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국익에 대한 자해행위라고까지 표현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지를 대선에서 약속하고 특검지역 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행이 어려워지니까 출구전략으로 책임없는 단체에 떠넘겨서 빠져나가려는 것으로 보이는 데 대선 공약 출구전략에 드러난 것만 손해가 1000억원이다. 야마 유무형 손해를 합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울러 "공론화위 의견을 인정하더라도 반원전 정책이 동의한 것이 탈원전에 동의하는게 아니다"며 "장기적인 에너지 대책은 국회에서 오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것이지 이렇게 졸속으로 정할게 아니다"고 공세에 나섰다.

◇野, 특별감찰관·방심위원 임명 양보 촉구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로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해임된 이후 1년 가까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은 여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천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추천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식 상태로 있는 것"이라며 "여당이 추천하거나 여당이 관여한다는 것은 비리를 예방하는

커녕 이를 원천적으로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 공백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120석의 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 8석을 (가져가겠다고) 고집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며 정부여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선진화법 개정, 지자체정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등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도 "살아있는 권력이 무소불위로 권력을 행사하다가 정권이 끝나면 그것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는 악순환을 방지하려면 특별감찰관은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에 대해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방식으로 합의가 돼 박홍근 원내수석이사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해서 3명을 여야 합의로 (정외대에) 추천하고 정외대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원내수석에게 합의가 됐다"고 부연했다. 단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야당이 추천권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홍근 원내수석도 전화통화에서 "여야 합의로 3명을 추천하자고 국감 전 원내수석간 합의가 됐다"며 "특별감찰관 후보를 불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다음달 8일 오전 9~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11월 8일 오전 9~10시에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조정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安, '유승민 개혁보수 원칙'에 "경선 상황 내부용 메시지 해석"

"'당내 30명 통합찬성' 여론조사 보고받은 바 없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개혁보수 원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합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복잡한 상황에서의 내부용 메시지라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국정감사가 지나고 나서 내부에서 서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며 "일단은 국정감사에 충실하, 열심히 하고 이제 저희들 당 내부 지역위원장 총사령관들을 정리하는 일이 먼저다"고 말했다.

그는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관련해 지도부 간 어떤 약속 같은 것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며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면 잘 치를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런 논의들을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안 대표는 당 내 일부 의원의 이견과 탈당 시사, 등 소용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전현직 지도부나 중진의원들과의 식사 약속을 정리화해서 만나고 있지만 잘 못 나오고 있다"며 "야마 국감기간이라 그럴 것이다. 열심히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최근 당내 30명 의원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성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선 "보고 받은 바 없었다"며 "저는 그런 논의 자체를 국감 끝나고 나서 시작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말씀드렸었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자강과도 숨 고르기 "전대 전 합당 논의 자제하자"

국민의당으로부터 적극적인 통합 러브콜을 받고 있는 바른정당 자강파가 23일 "전대 전 합당 논의 자제하자"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바른정당 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과 국민의당과의 통합과는 전당대회 전까지 합당 논의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한국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전대에서 자신의 비전과 노선을 갖고 대논쟁을 하자"고 말했다.

진수희 최고위원도 "저는 한국당과의 통합은 원칙과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며 "비단가지로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통합 논의도 우리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

지도 않고 시점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진 최고위원은 이어 "국정감사 기간이기도 하고, 공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11월13일 전대까지는 일체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의 자제를 위한 만능도 자제해야 한다"며 "전대를 치르고 제22당의 각오를 갖고 개혁보수의 가치를 하는데 까지 해보고 그때 가서 국민들에게 평가와 심판을 받아보자"고 덧붙였다.

유승민 의원 역시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저와 바른정당의 동지들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개혁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회동설에 대해서도 "당장 만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무료상담환영"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